안으로 곪은 민주, 계파 충돌 '폭풍전야'

비주류 "지도부 총사퇴 안하면 전대 준비위 회의 보이콧"

사의 표명 정대표 "지도부 공백 최소화… 총사퇴는 안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며 거취에 대한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당내 주류와 비주류사이에는'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해온 비주류 측은 일단 정 대표의 결단을 주시하며 주말 사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

그러나 비주류 측에서는 정세균 대표 등 주류 측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충돌이 격화될 조짐이다.

일단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 정 대표는 주말 동안 당내 인사들과 잇달아 접촉을 갖는 등 거취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정 대표가 2~3일 이내에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과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를 명분으로 대표직 사퇴와 함께 당권 재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계속 대표직에 머물러 있을 경우, 비주류의 사퇴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표직 사퇴와 함께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와 당권 도전을 선언한다면 선거 패배에 따른 불명예 퇴진의 색채도 엷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지도부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부 가운데 자신만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의 최고위원 진영 등 현재의 지도부가 주류 측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도부 총사퇴가 이뤄질 경우, 주류와 비주류 인사들이 균형있게 구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권 가도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주선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은 비주류가 주장하고 있는 지도부 총사퇴론에 가세하고 있어 지도부 총사퇴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직 선도 사퇴를 통해 정 대표를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선거 패배 책임론을 떠나 지도부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먼저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주류측은 지난 주말 정 대표 등 주류 측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위 첫 회의부터 '보이콧' 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대표의 사퇴가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의 내홍 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며 거취 결정이 늦어질 경우 당장 3일 의원총회에서 계파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 쇄신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달 30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사의표명으로 당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지난 7·28 재보선 유세 중인 손학규 상임고문, 정세균 대표, 정동영 상임고문. /연합뉴스

여권 화해무드로 가나

이대통령-박근혜 이달 중순 회동… 관계복원 관심

한나라당의 7·28 재보궐 승리를 계기로 여권 내부에 화합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관계 개선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지난 10개월간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관계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조금씩 변해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카드는 박 대표와의 관계복원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임 실장과 정 수석이 박 전 대표와 각별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 총리'로 불렸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퇴도 '세종시 수정 반대'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인 카드로 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제 공은 박 전 대표로 넘어 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만큼 박 전 대표가 화답을 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표가 당내 주류인 친이계를 포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계기는 이달 중순 이뤄질 이 대통령과의 회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회동을 통해 그간의 앙금을 털고 정권의 성공과 여권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여권의 화해 모드가 정점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양측 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급격한 화해'는 근본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 주류 측의 꾸준한 관계 개선 노력이 없이는 양 측의 근본적인 화합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재보선 결과로 여권의 화합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표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LH공사 퇴출 사업장 선정기준 뭔가"

이용섭의원,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 촉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최근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및 사업 중단은 정부의 무리한 통합작업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했다면 부채비율이 높기는 해도 구조조정을 병행해가면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와 LH공사가 퇴출 사업장의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업장 위주로 퇴출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LH공사가 광주·전남의 '빛그린산업단지' 보상은 내년 이후로 미루면서 같은 날 산업단지로 승인되고 규모는 두배 수준인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이번달부터 보상이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LH공사가 전국 4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출 지구' 선정 작업을 벌이는 것과 관련,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LH공사를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와 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중단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대 규칙' 힘 겨루기 본격화

오늘 전대 준비위 첫회의… 지도체제 싸고 계파간 수싸움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2일 첫 회의에 들어가면서 '전대 규칙'을 둘러싼 당내 계파간 힘 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지도체제와 투표 방법, 당권·대권 분리 등을 둘러싸고 계파와 후보별 이해 득실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실리와 명분을 얻기 위한 계파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비주류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의 총사퇴와 임시 지도부 구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대기구의 인적 구성이 '주류 일색'이라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기선 제압을 위한 행동에 나설 태세다.

전대 규칙 중 최대 쟁점은 지도체제다. 정 대표와 친노, 486 등 주류 측은 '집단지도체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현행 단일성 지도체제를 주장해온 반면 비주류 측은 '1인에 의한 사당화는 안 된다'며 집단 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친노와 486의 입장에선 집단지도체제로 갈 경우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등에 밀려 지도부 입성이 어려워진다고 판단하는 반면, 비주류 측에서 당 대표를 노리는 주자들은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지도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당권과 대권 분리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비주류는 '사당화 방지'를 위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동영 의원 측은 내심 분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세균 측도 마찬가지다. 물론 명분은 '강력한 리더십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으로 대권 후보를 거머쥐기 힘든 상태에서 승부수는 당권 장악 후 2년 동안 당 조직을 자신의 조직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손 전 대표 측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당의 변화와 차기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면 어느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대통령 여름 휴가 일주일간 정국 구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떠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 다음달 5일까지 휴식을 취하면서 정국 구상을 할 예정이라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식 휴가 기간은 이달 5일까지로 주말 이틀을 포함하면 일주일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기간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국내 한 휴양지에 머물면서 취미인 테니스와 독서 등을 하며 오랜만의 '망중한'을 즐길 계획이다. 특히 이번 휴가 기간 이 대통령은 내각 개편과 함께 8·15 경축사에 담을 후반기 정국운영 방향을 구상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돌아올지 주목된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음달 9~10일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8·15 특사 대상에 노건평씨 유력 검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8)씨가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노씨가 이번 8·15 특사의 취지인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적합하고 상징성도 크다고 판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여름휴가 기간 동안 노씨의 특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추징금 3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노씨의 특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